"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일반 공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내년부터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의 청렴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반부패와 청렴 정책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등 청렴도 평가 대상 인원이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점수 계량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용역도 발주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에 맞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474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올해부터는 기관별로 순위를 매겨 발표키로 했으며, 아울러 기관별로 발생한 부패사례와 적발·처벌 실적도 점수화한 후 별도의 지수로 발표키로 했다. /연합뉴스

노건호씨 LG전자 복직 근무지 복귀 美 출국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휴직 중이던 LG전자에 복직, 근무지였던 미국 샌디에이고 법인 복귀를 위해 13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건호씨는 최근 LG 전자에 복직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호씨의 가족들은 먼저 미국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건호씨는 올해 1월부터 LG전자 미국 샌디에이고 법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 500만 달러를 투자받아 IT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4월 귀국했으며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봉하마을에 머물러 왔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회사측에 올해말을 기한으로 휴직계를 제출했으나 지난달 기념사업 재단인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설립과 생가 복원 등이 마무리되면서 복직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윤석 의원 무안기업도시 비난 파문

"성과없이 주민만 희생" 現군수 정면 공격

서삼석 군수 해명자료 내고 불쾌함 표출

이윤석 의원

서삼석 군수

민주당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토 서남권 최대 현안 사업인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 군수의 최대 역점사업을 꼬집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정치권의 세 싸움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경면 무안 스포츠파크 조성공사 현장에서 열린 무안군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 의원은 축사와 함께 무안기업도시와 무안반도 통합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5년 가까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다"면서 "매년 금융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미 실행에 의한 무안군 재정부담은 늘어가고 있고, 성과없이 1천200만 평 이상의 땅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장기간 묶이는 바람에 주민들은 희생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하겠다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국가지원은 주무부처에서 부인하고 있다"며 "기업도시 사업의 추진현황과 수 백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산규모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에 무안기업도시 추진이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잘못 처리되고 군민의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현 서삼석 군수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까지 덧붙였다.

행사가 끝난 후 해명 보도자료를 낸 무안군은 "기업도시 업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더 성숙한 자세로 더욱 열심히 추진해 반드시 성공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정면 대응을 자제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역에서는 최대 현안에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참석자 대부분이 유권자들인 공개된 장소에서 현직 단체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은 기업도시 한·중 산업단지의 중국 측 투자자 최고위층인 중국 상무부 관계자와 중국 총영사 등이 업무 협의를 위해 무안군을 방문 중이어서 이 의원이 한·중 산단 추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장기간 사업이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고, 피로가 누적돼 있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도는 추호도 없고, 주민들의 불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책선거 실천하겠습니다"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오는 28일 실시되는 수원장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찬숙, 민주당 이찬열, 민주노동당 안동섭(왼쪽부터) 후보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을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정몽준-안상수 화해 무드로

안 원내대표 "정대표 중심 뭉쳐 재보선 승리"

최근 조기 전당대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사이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안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10월 재보선 전략을 언급하면서 '정 대표 중심 필승론'을 2차례 역설했다.

그는 "이제 막 시작한 새 내각이 정략적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정 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의원과 당직자, 당원이 똘똘 뭉쳐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고 이명박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원내대표인 저부터 솔선수범해 정 대표와 굳게 뭉쳐서 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두고 당 일각에선 정 대표에 대한 안 원내대표가 화해의 제스처로 해석했다.

이에 정 대표 측도 화해의 손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원내대표와 사이가 나쁘지 않고 갈등을 빚은 적도 없다 "며 기존 불화설 자체를 일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년 도입 지방소비세 5단계 차등 지급해야"

강운태 의원 국감서 수정안 제시

정부가 지방재정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지방소비세와 관련, 3단계로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 대신 재정자립도 고려해 5단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인용, 2008년 감세정책으로 5년간(2008~2012) 중앙정부의 재정은 90조원의 세수 감소가 있고, 지방정부는 30조2천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방소비세 도입 총액의 50%(1조1천409억원)는 정부안을 적용(100~300%)하고, 나머지 50%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안은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시·도 300%로 가중치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강 의원안은 지방소비세액의 나머지 50%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00% ▲부산·울산 200% ▲광주·대전·대구 300% ▲경남·경북·충남·충북 400% ▲전남·전북·강원·제주 500%로 가중치를 부여, 재정자립도가 세심하게 배려되도록 했다.

이 같은 강 의원안에 따르면 ▲서울은 정부안보다 1천357억원(3천152억원→1천795억원) ▲경기도는 1천218억원(2천875억원→1천656억원) ▲부산은 526억원(1천929억원→1천403억원) ▲경남 316억원(2천388억원→2천72억원 ▲인천 121억원(681억원→560억원) ▲경북 113억원(1천980억원→1천867억원)이 각각 감소한다.

반면, ▲광주는 정부안보다 283억원(750억원→1천33억원) ▲전남 472억원(1천251억원→1천723억원) ▲전북 454억원(1천285억원→1천739억원)▲제주 905억원(385억원→1천290억원) ▲강원 557억원(1천79억원→1천636억원) ▲충북 358억원(1천39억원→1천397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비교적 공평하게 1천억원대의 지방소비세를 교부 받아 지방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좋은 아이디어"라며 "행안부 장관과 장관과 상의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소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세훈 시장 용산참사 발언 위증"

이용섭 의원 주장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산 을)은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산참사 유가족 지원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증 주장을 제기하며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 시장은 지난 8일 '용산 참사 발생 구역은 민간사업이어서 공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정비 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오 시장이 용산참사 유가족을 진심으로 돕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유가족이 요구하는 임시상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